

# 동아시아 협력 이론의 분석과 적용 : ASEAN+3을 중심으로\*

이요한\*\*

## I. 서론

신국제질서의 도래는 전통적 국가의 쌍무관계와 다자관계에 대한 질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냉전의 붕괴, 금융(자본)의 역할 증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국가간의 장벽을 더욱 허물게 하였다. 지역적으로 근접한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한 시도는 이제 경제협력 또는 지역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의 강화는 동아시아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활성화시켰으며, 1990년대 말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는 더욱 이러한 노력을 가시화 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성과는 여타 주요협력체에 비해 미미한 가운데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부진 이유를 대부분의 연구는 정치체제의 상이성(相異性), 경제규모의 비대칭성, 사회문

---

\* 본 논문의 내용을 위해 많은 조언을 주신 한국외대 양승윤 교수님과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박광섭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질을 향상시켜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원,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겸임교수, oceania2000@hanmail.net

화적 이질성 등으로 분석해왔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지역화 현상은 동아시아의 대응에 대한 정치·경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를 양산시켰다. 그러나 지역협력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는 달리 동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현황과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본고는 동아시아지역협력의 근본적 문제가 실현 가능한 협력기반 창출의 실패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EU와 NAFTA 등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결과에 대한 성급한 결론에 이르곤 하였다. 본고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에 단순한 언급이나 타협력체와의 획일적인 비교(특히, 경제통제)에 초점을 두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협력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분류와 이론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둔다.

제 2장에서는 지역협력에 관한 주요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과 유사한 개념들로서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혼용(混用)은 분석대상에 대한 혼란과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동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크게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의 시각을 살펴보고, 각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지역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의 검토이다. 지역협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신현실주의(neorealism)·신자유주의(neoliberalism)·신자유주의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의 관점이 각각 어떻게 다르며, ASEAN+3(한·중·일)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절한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지역협력의 개념, 연구, 이론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ASEAN+3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대한 적절한 분석적 틀을 감히 제공하고자 한다.

## II. 지역협력의 주요 개념

### 1. 지역화와 지역주의

지역화(regionalization)란 상호의존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지역이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성격이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특히 경제관계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 지역이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역화라는 현상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추진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득 또는 효율성이라는 시장원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특정지역의 지역화의 진전이 역외지역을 차별하거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표 1〉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역외 무역비중

(단위: 백만불, %)

			금액		비중		증가율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총액	수출	역내	349,606	437,626	35.8	37.2	8.0	25.2
		역외	626,496	739,802	64.2	62.8	5.6	18.1
	수입	역내	337,565	433,070	39.3	40.0	8.8	28.3
		역외	521,288	650,689	60.7	60.0	9.8	24.8

자료: JETRO, 2001

지역화의 특징은 첫째 국가 또는 국가 간 정책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국가 간 특정한 목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둘째 지역화의 형태는 국

경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장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경계'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화는 이데올로기나 정책으로서 지역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계기에 의해 지역화 현상이 특히 국가에 의한 정책적 의도와 결합할 때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Scalapino 1992: 32). 기업 간의 무역증가, 기업 합병, 전략적 동맹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대가 역내국가의 국민 간 유대감과 정체성(identity)을 증가시킨다. 지역화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힘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이 48.5퍼센트에 이르러 NAFTA의 46퍼센트, EU의 53퍼센트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WTO, 2000) 엔고에 의한 일본의 동남아투자로 시작된 지역화는 이후 아시아신흥공업국가군(ANIEs: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의 경제성장과 확대, 중국시장의 부상(浮上)으로 더욱 긴밀화되고 있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지역적 단결이나 협력을 옹호 또는 주장한다는 의미의 지역주의는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Mansfield et al. 1997: 1). 하나는 지역협력 자체를 하나의 '가치' 또는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주의는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역적 일체감 또는 정체감에 근거를 두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된다. 유럽인들이 유럽의 단결을 주장한다든지 아시아국가들이 아시아인의 단결을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전후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유럽주의와 2차 대전시 일본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 등은 지역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 그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라기보다는 특정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수단적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역주의」와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단적 지역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대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을 추진하게 되면 기능적 협력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지역

국가들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는 대외적으로 배타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의 경우 이러한 측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기구가 창설될 당시 ASEAN국가들이 지역적 일체감에 의해서 지역기구를 창설한 것은 아니었다. 동남아가 강대국의 세력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공산주의의 위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후 ASEAN은 국제무대에서 회원국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유럽 역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경쟁에서 유럽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높여야한다는 점이 유럽의 통합을 진전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1980년대 말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패권을 보강하고 세계무역질서를 다시 주도하기 위한 동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대표적 시도인 ASEAN+3은 국가체제·종교·문화적 상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일체감의 형성을 통한 지역주의의 추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이 시도했던 '동남아공영권'이나, 냉전시기에 조성된 '반공(反共)연대'와 같은 확일적 지역주의의 지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정체성(identity)의 형성을 통해 지역주의를 모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상호의존의 자연적 증가로 형성된 지역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시도가 동아시아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2. 지역협력과 지역통합

지역협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책영역에서 상호 이득의 추구를 위해 셋 혹은 그 이상의 지리상으로 인접한 독립국가들의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협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Alagappa 1995: 362). 이 정의에 따르면, 지역

협력의 핵심적 특징은 참여 주체가 셋 이상이라는 점과 그 행위자들의 지리적 인접이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도 셋 이상의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지역협력은 지리적 인접에 기초한 협력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와 달리 지역기구의 회원자격은 개방적이지 않다(Kahler 1993: 295; WTO 1995).

지역협력은 일반적으로 일정지역 내 특정국가 간 공통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특수한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이창재 외 1999: 112-113). 지역협력의 공식적·비공식적인 형태의 분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간 협력은 공식적 기구의 형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 즉 “국제관계의 특정한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 규범, 결정 절차의 집합”이라고 정의되는 레짐에 의해 이루어진다(Krasner 1983: 1). 따라서 지역협력이란 공식적인 제도의 창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다 느슨한 구조의 정규적인 회합이나 규범들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것이다. 협력을 위한 레짐은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국제제도에서의 집단적 영향력 행사와 타블록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때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호의존의 증가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Hurrell 1995: 42). 안보 측면에서는 지역내의 세력 균형을 통한 안정화, 신뢰구축의 제도화, 안보협상의 레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지역협력은 지역통합과는 달리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나 정치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김세원 1996: 147). 지리적 인접성을 강조하게 되면 한 지역의 형성을 자연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이나 유럽이라는 지역이 일정한 지리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이 지역들도 ‘인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Wallace 1990: 7-34).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이 지역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지역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 협력

의 최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의 산출도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지역의 경계는 새로운 지역 형성의 정치경제적 유용성이 계산된 이후 참여 주체들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결정은,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응집시키기 위한 제도나 상징의 발명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Nathan 1988: 89). 따라서 지역주의가 지역통합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의의 출현이 곧 지역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과 통합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경제통합이 새로운 '지역경제단위' 또는 초국가적 경제제도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정부 간 협력은 주권국가 정부들 사이의 특수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한다면, 지역통합은 회원국가들 사이의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정부 간 협력은 지역통합에 대한 계획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Smith 1993: 5).

〈그림 1〉 지역협력의 발전과정과 사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ASEAN+3이 지역협력의 전 단계인 지역화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ASEAN+3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유럽과 북미 지역과 대등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냉전의 종식과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협력의 분위기는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지역화는 지역협력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지역화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고는 지역협력을 유인(誘因)할만한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없다. 즉,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협력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는 지역협력의 이익을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화가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화를 기초로 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부재하거나 관련 모델들이 쉽게 소멸되어 왔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화가 더욱 진전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정책의 조정을 통한 구체적인 지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EU·NAFTA 등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 Ⅲ. 동아시아 협력의 기존연구 평가

#### 1.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국내연구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최창규(1996)의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가능성 검토”와 김현중(1997)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EAEC)에 관한 소고” 등이 있다.

최창규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형성을 위한 기본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동아시아가 경제블록을 형성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동력모형(gravity model)을 설정하여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최창규 1996: 72). 그는 회귀식 추정결과 일본, NIEs, ASEAN, 중국간의 역내교역은 18퍼센트 정도 증가한다고 보았다.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EU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NAFTA와는 8퍼센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최창규 1996: 74). 최창규의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익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지역협력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에 대한 개별국가의 의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김현중은 1991년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EAEC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입장과 상호의존 현황 그리고 EAEC의 발전방안에 대



한 제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과 정책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진일보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내용들이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EAEC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변수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취약함을 지적할 수 있다.

동아시아협력에 관련한 국내연구는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가 복잡하게 얽혀진 상황을 간과할 때가 많았다. 동아시아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노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 2.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해외연구

카첸스타인(Katzenstein 1996)은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주의를 비교연구 하였다.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과정과는 달리, 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주로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1960년대에 전 세계의 4퍼센트에 불과했던 동아시아의 GDP 합이 1992년에는 25퍼센트에 이른 점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동아시아 역내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상호의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EU에 대응할만한 아시아의 공식기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가장 성공적인 ASEAN 조차도 관세인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Katzenstein 1996: 136). 이는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지역협력이 일본의 동기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의구심으로 대부분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APEC은 협의체(consultative forum)에 불과하며, 지역협정이면서도 GATT 보다 오히려 개방에 대해 더 적극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이나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등 배타적인 성격의 지역적 성격의 기구는 형성되

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반대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았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서구적 개념의 '공동체(community)'가 존재하지 않으며 '느슨한 가족형 유대(loose family-type linkages)'와 '공식적인 제도 개념의 회피(avoid the notion of a formal institution)'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Katzenstein 1996: 144).

그러면서 카첸스타인은 아시아 지역주의의 두 가지 결정 변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1945년 이후 미국의 외교관계가 유럽에 대해서는 다자주의적 정책을 펴온 반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쌍무적인 관계를 중시해왔다. 따라서, 아시아는 유럽처럼 제도화된 정치적 합의의 경험이 적고 이것이 지역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 국가의 제도화는 전통적인 유럽통합의 형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Katzenstein 1996: 146).

그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또 다른 걸림돌로 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구조 문제도 지적한다. 유럽국가는 합리적 형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식민통치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해당국가의 정치구조에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중국을 리더십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발생은 어려우며, 경제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중심 지역주의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지역주의는 공식적 제도의 형태를 띄는 것을 회피할 것이며 주로 경제적 시장의 개념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Katzenstein 1996: 148).

자오(Zhao)는 카첸스타인과 비슷한 견해로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Suisheng 1998: 97-134). 그는 1997~1998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목표를 필요로 하게 하였다고 본다(Haas 1961: 376; Nye 1971: 23-24). 태국 바트(Baht)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시작된 통화위기는 인도네시아·필리핀·한국 등에서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겪게 하였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제반 협력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협력 실현이 어렵다고 보는 이들은 위와 같은

난제들을 아시아국가들이 극복하는데 실패했으며,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Ryokichi 1988: 99).

그러나 자유는 이와 같은 견해가 동아시아국가들의 협력 노력을 구조적 지역주의(structural regionalism)의 입장에서 본 편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성지역주의는 정형화된 구조를 갖지 않고 국가상호 간의 협력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Scalapino 1987: 7), 또한 경제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며 제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Gilpin 1993: 33). 연성 지역주의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이 국제제도와 법률의 정비를 가져오게 되며, 일단 경제적 상호의존이 진행되면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Keohane 1989: 4-5).

연성지역주의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나 경제단위가 공식적인 협정 없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구조적 지역주의란 정부 간 공식적인 협정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적 지역주의를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대국에 의한 소국의 주권 침해가 예상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산주의부터 유교적 체제와 입헌군주제로부터 군사독재까지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xelrod et al. 1993: 87).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규모와 정치적·인종적 대립, 계층 간의 오랜 반목, 경제적 불균형 등은 지역협력의 형성에 장애물이 되어왔으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탈냉전 시대에도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냉전적 시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중심의 구조적 지역기구의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요는 경제성장에 의한 상호의존의 증가가 지역주의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협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각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역'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게 한다(Suisheng 1998: 104).

그는 상호의존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서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커헤인의 기존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 민감성이라는 것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행동함에 있어서 상호변수가 된다는 점이고,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호의존의 개념은 한 국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가는 주권을 유지한 채 독립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국가의 선택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성 지역주의는 주권 문제를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상호의존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uisheng 1998: 105).

그는 APEC을 구조적 지역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느슨한 협의체에 불과하던 APEC이 1993년 정상회담으로 격상되면서 구조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isheng 1998: 124). 하지만, APEC이 공식적 기구로 계속 발전할 경우 동아시아의 일부국가가 강대국에 의해 종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APEC이 아직도 느슨한 지역포럼과 공식적 지역기구, 개방적 지역기구와 배타적 지역기구 사이의 논쟁이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는 구조적 지역주의가 아시아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았다(Suisheng 1998: 133).

카첸스타인과 자오는 모두 아시아가 연성 지역주의의 형태를 띄게 될 때, 지역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신현실주의에서 주장해 온, 기존의 아시아지역주의 무용론이나, 회의론에 비해서 진전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아시아 지역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러한 출발점은 경제적 네트워크가 동기가 된 연성지역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지역화의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낙관적 견해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이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 '경제적 요소'만이 협력의 동인인 것은 아니다. 역내의 국가들이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부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수가 제외되어 있다.

연성지역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현재 어떤 지역이 '지역화' 되어 있다는 것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화'가 어떻게 '지역협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신자유제도주의의 협력이론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하여, 협력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의도 그리고 제도 형성 방안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한계점 속에서 ASEAN+3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불가능하고,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패권국가 주도하는 질서에 약소국이 편입되는 형태를 띤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상호의존의 증가가 지역협력에 대한 수요(demand)를 가져온다는 관점을 수용하고자 한다. 최근 시작된 동아시아의 협력의 원인이 상호의존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또한 카첸스타인이나 자오와 같은 연성지역주의자들은 경제·사회적 협력이 정치·안보 영역으로 확대(spill-over)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경제협력의 메커니즘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본고는 국가가 지역협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 행위자로 보고 있으며,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정책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 IV. 주요이론과 동아시아 협력에의 적용

### 1. 신현실주의

신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은 지역협력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신현실

주의는 권력의 경쟁, 국제기구 역할의 한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은 논의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았다(Hurrell 1995: 47). 다만, 동맹 형성과 관련된 정치적 역학이 지역주의와 지역협력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EC(현 EU)의 창설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유럽국가의 단결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한다(Walt 1987: 10). 1940~1950년대 유럽은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과거와 같이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에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서부 유럽국가들은 초강대국들의 틈새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하게 되었고, 당시의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현실주의는 경제적 지역주의 역시 경쟁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본다(Hurrell 1995: 49).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즉 NAFTA · APEC은 EU와 일본의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오던 다자주의와는 별도로 지역주의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현실주의는 탈냉전 후 아시아의 지역주의 역시 미국-중국-일본의 세 가지 핵심국가의 경쟁과 힘의 구조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성격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는 신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패권안정이론(Hegemony Stabilization Theory)과도 관련이 깊다(Gilpin 1987: 72-80; Krasner 1976: 314-347). 패권안정이론은 세계질서의 안정을 위해 하나의 패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패권안정이론은 공공재이론(Public Good Theory)처럼, 국제체제의 안정은 공공재이며 이것의 공급을 누군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공공재 공급을 아무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제체제는 불안정해진다고 본다(Kindleberger 1973: 305).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각각 패권의 전성기에 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을 그 사례로 지적한다. 현재 신현실주의 통합이론은 과거 현실주의 통합이론에서 강조되던 국제체제에서의 위치보다는 '국내의 정치과정'을 통해 정의되는 국가이익에 주목하고 있다.(Hoffman

1966: 21) 신현실주의 통합이론의 지배적 형태인 '정부간 관계론'(intergovernmentalism)은 단일유럽시장의 형성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이후의 유럽통합을 설명함에 있어 주요 회원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책전환, 즉 이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적 정책의 선택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세 국가의 정부가 국내정치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수행하는 최초의 공통분모 협상을,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한다.

신현실주의가 중시하고 있는 국가 간의 경쟁관계, 패권국에 의한 국제체제의 안정에 관한 그 내부적인 비판점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실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동아시아 국가 간 정치와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계개선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국가들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인 이익을 절대적인 이익보다 중시한다는 신현실주의적 관점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은 패권국의 주도에 의해서 형성·발전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역내 강국인 일본에 의해 제안된 협력 모델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모두 소멸하였으며, 현존하고 있는 협력체 및 협력 기구들은 중소국가에 의해 대부분 제안되었다.<sup>1)</sup>

##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국제사회에서는 이기적인 국가 간에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국가는 행동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밖에 지배할 수 없는 선택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 행위자가 이기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행동의

1) ASEAN+3 정상회의와 ARF는 ASEAN, APEC은 호주,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은 한국에 의해 각각 제안되었다.

결과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독립적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협력은 개별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발생하며 나아가 제도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체제 구조와 이기적 행위주체로서의 국가라는 현실주의의 이론적 전제를 수용한다. 그러나 결론은 현실주의 이론과 상반된다. 무정부적 상황에서 국가들의 이기적 행동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는 현실주의자와 달리 이들은 국가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제정치를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과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치의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것이라면, 각 국가들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배신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자신도 배신할 수밖에 없다. 차악(次惡)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악의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은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배신이 지배적인 전략이 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조차도 협력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게임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 합리적 행위자들은 미래의 손익까지도 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게임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배신이 협력보다 열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임이 반복된다면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장래의 보상이 배신보다 가치가 있을 때 협력의 동기가 발생한다. 자신의 배신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 게임에서 보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보복으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되는 피해까지 장래의 보상에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가장 보상이 높은 선택이란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협력을 하며, 또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for-Tat)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 현실주의 이론의 전제를 배척하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현실주의이론은 국제사회는 중앙권위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나 합의의 집행이 어렵고, 따라서 국제협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게임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의 성공은 지금의 배신이 미래에 처벌을 받고, 지금의 협력이 미래에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체제에서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보상 또는 처벌함으로써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위자들은 협력이 보다 우월한 선택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것은 무정부 상태 하에서도 국가 간에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태현 외 1993: 204).

신자유주의자들은 협력은 조화(harmony)와는 다른 개념으로 본다. 조화란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다른 행위자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행위자들의 정책이 자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 각 행위자들 간에 협력은 필요 없다. 그러나 협력은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라 불리는 협상의 과정을 통해 조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나 기구의 행동을 임의로 일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 조정의 결과로 한 쪽의 정책이 다른 쪽에 의해서도 자신의 목적 실현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과정으로서 잠재적인 갈등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Keohane 1984: 5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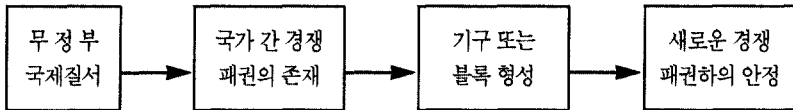
### 3. 신자유제도주의

신자유제도주의 이론은 최근 들어 국제협력에 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적 접근법으로 인식되고 있다(Hurrell 1995: 61). 신자유제도주의 이론은 몇 가지 핵심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호의존의 증가는 협력의 수요를 증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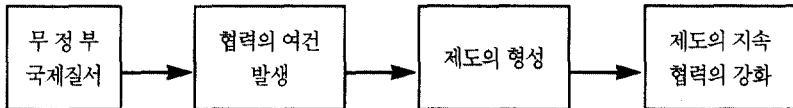
킨다. 이때 작용하는 제도는 “행동역할을 규정하고, 행동을 구속하며, 기대를 구체화시키는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인 규칙의 지속적이고 관련된 집합”이라고 정의된다(Keohane 1989: 2-4; Young 1980: 337). 규범(norms), 규칙(rules), 제도(institution)는 국가 간 공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국가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림 2〉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 협력 메커니즘 비교

신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둘째,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가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기본적 가정은 신현실주의와 같지만,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로 본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전술한 지역화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국가 이외의 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만이 효율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초국가관계론이나 상호의존론(Keohane et al. 1977: 15-25)에서 제기하였던 국가의 해체화 작업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국가가 무정부 상태 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반드시 자신의 생존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모든 문제 영역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기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절대적인 이익에도 관심을 가진다. 국가 간의 협력이 이기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도이며 따라서 각 국가는 레짐 안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문제 영역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국가의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도는 정보의 교환, 투명성과 감시의 확대, 거래비용의 감소, 기대이익의 공유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제도주의 이론은 전략적 상호작용이 주어진 국제관계 속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중 하나인 레짐(최석훈 1991: 3-4)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문제 집합과 관련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제도를 의미한다. 레짐이란 “국제정치의 주어진 한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결정 절차의 집합”이라 정의된다. 이는 국제기구와는 다른 것으로서 IMF나 OECD 등은 국제기구이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는 레짐에 해당된다. 레짐의 발생원인으로선 이기적인 개인 이익, 정치적 권력, 규범과 원칙, 관용과 관습, 지식 등을 들 수 있다(Krasner 1983: 11). 자신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개인 이익의 추구 시에도 레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에서도 협력이 일어난다는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 상태가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구속하기는 하나 무정부상태인 국제관계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최석훈 1991: 88).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에는 자유주의 경제 진영국가들이 국제무역, 통화가치, 경제부흥 등 경제영역에서 오랫동안 협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국제제도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신자유주의는 주장한다. 즉, 현실주의 이론으로는 1980년대 이후 국제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중요한 협조적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ATT체제로 대변되는 국제무역제도가 가능하게 되어 자유무역을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을 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자유무역을 위한 새로운 국제제도인 WTO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제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

이 국가 간 협력의 소산이라고 신자유주의 이론은 설명한다.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제도가 각 국가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재정의하고 국가 간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Keohane 1989: 7).

국제제도는 행위자들이 상호합의를 통해서 행위의 원칙과 규범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행위자(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제도는 양질의 정보를 행위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Keohane 1984: 165). 어떤 행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때,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국제제도의 형성으로 인해 국가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변화가 생긴다. 행위자가 국제제도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위반에 따르는 비용을 높이고, 상시적 또는 정기적인 협상의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추어 여러 관련 현안간의 연계를 용이하게 한다. 결국 국제제도는 국가 간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협상 기회를 높이며 행위자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각 행위자들이 협약을 이행할 능력을 높인다. 국제제도는 그 제도에 소속되어 있는 행위들 간에는 국제협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적 무정부상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여 합리적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해준다.

신자유제도주의 협력이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국제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론'(Neo-Liberal Institutionalism)이다. 둘째,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다수 국가의 이기적 국익추구가 반드시 국제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의 분권적 집행'(Decentralized Enforcement of Cooperation)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국제협력이 발생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견해이다.

〈표 2〉 지역협력에 관한 주요 이론의 비교

	신자유제도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주체	국가	국가 또는 패권	기업, 국제기구
변수	정치, 경제	정치	경제
동기	제도	기구	네트워크
협력관계	국가 ↔ 민간	국가 ↔ 민간	민간 ↔ 국가
이익관계	협력	경쟁	조화
협력형태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구조적 지역주의 (Structural Regionalism)	연성지역주의 (Soft Regionalism)

ASEAN+3 지역협력은 신자유제도주의의 시각을 분석틀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ASEAN+3의 출범의 결정적 계기는 동아시아경제위기이다. 동아시아경제위기를 통해 ASEAN+3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간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을 뿐 협력을 위한 지역화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다. 지역협력을 위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와 지속적인 노력은 타지역과 대등한 수준의 제도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국가의 개입이 배제되어 있는 일본의 안행형태론(flying geese model)이나 화인네트워크의 시도는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책적인 노력과 합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ASEAN+3의 출범은 세계적인 지역화현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당연한 대응이다. EU, NAFTA와 비교하여 대등한 경제비중과 역내의존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협력기구나 제도를 창출하지 못했다. 향후 성공적인 협력의 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가 '지역협력'에 초점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이념에 기초한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국가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동아시아국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급진적인 지역통합에 대한 노력 역시 동아시아의 제반 여건 상 부적절한 것이다. 통합에 대한 시도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통합체에 일부 이양해야 하는데, 국가주권에 민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이익의 증가가 가능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보다 적절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ASEAN+3의 협력수준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최초의 지역협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2002년 현재 6차에 걸친 연례회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외형적인 제도화는 갖추어져 있다. 협력 이익의 구체적 실현에 이르기까지는 부분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나, 동아시아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ASEAN+3 정상회의가 그 자체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ASEAN+3 지역협력은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나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된 신자유주의 이론보다는 정치경제의 종합적 분석을 요구하는 신자유제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신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수직적·종속적 협력은 동아시아 대부분의 회원국들에게 거부감을 유발할 것이다. 패권 중심의 협력 시도는 ASEAN+3 국가들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선호와 대립될 것이다. ASEAN은 역내협력의 주도권을 중국·일본과 같은 역내강대국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ASEAN+3을 먼저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명칭에 있어서나 개최지에 있어서도 ASEAN이 중심이 되어있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한국의 제안도 일축되었다. 따라서 ASEAN+3은 패권국가의 주도에 의해서 운영될 상황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패권국으로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호 대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경계가 심해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기능적 협력 역시 동아시아 협력이론은 적절치 않다. 하위구조(low-level)의 협력 경험이 상위구조(high-level)의 협력으로 확대

(Spill over)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수와 역사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주도의 수직적 분업모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 종속에 대한 우려와 반발로 퇴색되었으며, 기능적 협력의 성공적인 확대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차원의 정책협조와 정치적 의지가 기반되지 않는 여러 노력들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지역은 향후 그 협력의 정도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이견(異見)이 크며, 따라서 이를 극복할 연구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ASEAN+3은 회원국이면서도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협력레짐(regional regime)이다.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표면적인 상황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보다는 장기적·전략적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주제어 :** 지역협력, 지역화, 지역주의, 상호의존, 국제관계, 지역통합, 동아시아 지역협력, ASEAN, ASEAN+3, EU, NAFTA, EAEC,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제도주의, 네트워크, 경제위기.

## 참고문헌

- 김세원. 1996.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한국경제 - 지역주의는 다변주의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경제논집』35(2-3).
- 김현중. 1997.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에 관한 小考." 『고황논집』21.
- 김태현·정진영. 1993. "패권 이후의 국제협력 논쟁과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하영선 편, 『탈근대지구정치학』서울: 나남.
- 이창재·홍익표. 1999. "동북아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
- 최창규. 1996. "동아시아경제블록의 가능성 검토." 『경제분석』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제2권 제3호.

- Axelrod and Keohane, R. 1993.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 in Baldwin D. A.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lagappa, M. 1995. "Regionalism and Conflict Management: A Framework for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 Gilpin, R. 1993. "The Debate about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Japan Emerging Global Role*. Boulder, Co: Lynn Rienner Publishers.
- Haas, Ernst B. 1961.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 European and Universal Proc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4.
- Hoffman, S. 1966. "Obstinate or Obsolete: The Fate of Nation-State and the Case of Western Europe." *Daedalus*. No. 95.
- Kahler, M. 1993.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in Ruggie, J.(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oxie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 1996.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nflict*. SAGE Publication; London, Vol. 31, No. 2.
- Keohane, R. and Nye, J. S.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eohane, R. O. 1989.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 Kindleberger, S.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 ~1939*. Berkeley: UCP.
- Krasner, S. 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al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 Krasner, Stephan. D. 1983. "Structural Cause and Regime Consequence; Regime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 Mansfield, E. D. and Milner. H. V. 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 Overview."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 Nathan, K. S. 1988.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ASEAN in World Politics." *Foreign Relation*. Vol. 3., No. 4.
- Nye, N. S. 1971. *Peace in Part: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 Ryokichi, Hirono. 1988. "Future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a Robert A. Scalapino and Masaka Kosaka, ed., *Peace, Politics and Economics in Asia: The Challenge to Cooperate*. Washington DC: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 Scalapino, R. A. 1987. *Major Power Relations in Northeast Asia*.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 1998. *Pacific Asian economic policies and regional interdependenc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 Smith, P. 1993. "The Politics of Integration: Concepts and Themes." In Smith. P. (ed.).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uisheng Zhao. 1998. "Soft versus Structured Regionalism: Organizational Forms of Cooperation in Asia-Pacific."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2(1). Winter/Spring.
- Wallace, W. 1990.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Europe*. London: Pinter Publishers.
- Walt, S. M. 1987. *The Origin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 WTO. 1995.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Geneva: WTO.
- , 2001.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 Young, O. 1980. "International Regimes: Problems of Concept Formation." *World Politics*. December.

Abstract

## **Reappraisal of East Asia Cooperation Theory : ASEAN+3 case**

Lee Yohan

(Sogang University)

East Asia has yet achieved a successful regional cooperation in spite of deepening regional interdependence. However, this study will show that the demand of a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n region grows larger than ever. It is because cooperation and a policy coordination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for common profits becomes more necessary. This article will consider the viewpoint of regional cooperation, change of an attitude of East Asia and policies on cooperation plan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studies of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which could be categorized into Korean and foreign perspective. I try to clarify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previous literature. I also define the main concepts relating to the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 regionalization, regionalism, and regional integration. This leads to finding an appropriate concept to East Asia' milieu.

Finally I hav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operation theory; neorealism indicates that a regional cooperation of East Asia is inherently impossible, at best their cooperation which makes less developed countries to be incorporated in

the system where the hegemonic power leads. And soft regionalism points out various background which prevents the political cooperation from emerging.

This article will consider the possibility and the prospect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s an alternative approach. Regional interdependence inevitably gives way to the demand of regional cooperation. East Asia should strive for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state-led pattern beyond bygone.

**Key Word: ASEAN,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Regionalization, ASEAN+3, Regional Integration, Mutual Dependency, Economic Crisis, Neorealism, Neoliberalism, Neoliberal-Institutionalism**